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4. 3. 13.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4년 3월 13일(수) 14:00~20:57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34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4년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4년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34호 『신한투자증권(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닌데 각주에 '3) 손실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실보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보고자) 환매가 중단된 것은 문제였지만 이후 운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꽤 높은 수익률의 원리금이 상환되어서 결국 경제적인 손실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기재한 것임

- (위원) 이것이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이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손실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성격이냐는 것에 대한 정리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음.
- (보고자) 그 표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정하도록 하겠음.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인 배상이나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환매중단 이후에 다시 운용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원금 이상의 수익이 되돌려진 결과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표현은 조정하도록 하겠음.
- (위원) 위반의 결과는 결과대로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손해를 배상한 것을 저희가 고려해서 재량감경을 한다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은 것인지?
- (보고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회사 측에서 뭔가 보상이나 배상이 있지는 않았고 운용이 중단되었다가 운용이 재개되었고,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배당금과 최종적으로 보상 받은 수익(return)등을 포함했을 때 원리금 이상의 금액이 결과적으로 환매가 되어서 이 설명의무 위반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 이것을 참작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음.
- (위원) 알겠음. 그러면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이 운용방법 외에 별도로 다른 고유재산으로 금융회사가 보존해 준 것은 없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없음.

○ (위원) 그러면 '손실보상을 포함할 경우'를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보고자) 알겠음.

○ (위원) 통상적으로 기준일로 삼는 7영업일보다 4일 지나 확인을 했으니까 위반의 정도로 따지면 훨씬 더 경미한 편인데도 자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진신고한 첫 번째 건보다 과태료는 더 크게 되는 것인데, 두 번째의 경우도 위반의 기간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감경 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함.

- (보고자) 금융위 유권해석 상 '상당한 기간'이라는 부분을 해석으로 제시한 이후 제재 관련해서는 7영업일을 기준으로, 통상의 다른 사유가 없는 한 7영업일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음. 조치의 선례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두 번째 건도 과태료 산정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제34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35호 『유안타증권(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고객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고객이 미성년자는 아닌 것인지?

- (보고자) 고객의 부친이고, 고령이셨음.

○ (위원) 고객 자체는 미성년자가 아닌 것인지?

- (보고자) 고객은 1978년생으로 미성년자 아님.

○ (위원장) 제35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36호 『코너스톤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지난 2월7일 증권선물위원회 소명의 자리에서 당
사는 투자중개업자의 요청에 따른 집합투자자산운용 금지

위반의 건을 겹쳐히 수용하였으며, 오시리아문화예술타운 개발사업 투자를 위해 당사와 당사의 2대 주주를 포함한 총 11명의 공동투자자들이 법무법인 바른의 법률검토와 자문, 매출 및 투자약정서에 따라 SPC를 설립하고 공동투자 이후 사후적으로 형성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당사 2대 주주의 주도 하에 이 투자 건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 및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막대한 이익을 몰아줄 의도나 실제 이익을 단 1원이라도 더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사금고화 되었거나 신용위험이 당사로 전가되지 않았음을 금융감독원이 요청한 당사와 SPC 간의 자금거래 내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사실만을 말씀드렸음. 오늘 당사를 다시 부르신 것에는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추가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문하시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음.

- ▶ (진술인) 이어서 법률대리인이 법률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의 판결례와 금융 당국의 2020년초 비조치의견서의 취지에 따를 때 본 건 규제에 따라 금지되는 신용공여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신용공여를 한 자금을 제공받는 최종 차주, 실질 차주가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는 위 규제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그로 인한 신용위험이 금

용투자업자에게 전가되어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에 있으므로 위 규제 목적과 무관한 형식상 신용공여까지 금지하고 제재 처벌하여야 할 정책적, 실질적 이유가 없고 자칫 이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위 규제위반은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항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투자업자가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발생시킨 주체를 그 신용공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함. 즉, 본 건에서 조치예정자 금융투자업자가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을 공여했는지 여부는 조치예정자가 신용공여를 투자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전체적인 투자금의 집행, 투자회수금의 분배, 실제 자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실제로 금융투자업자가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그 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투자판단을 하여 신용을 공여한 대상인 실질 최종 차주가 누구인지를 밝혀서 그 최종 실질차주가 조치예정자의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임. 그런데 본 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SPC는 첫째 설립 목적 실제 운용과 전체적인 자금흐름상 오로지 본 건 투자만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투자기구 수단으로써 투자관련 자금이 흘러가는 도관의 역할만을 하였고, 둘째 본 건 투자와 관련하여 조치예정자를 포함한 투자자, 해당 자금을 실질적으로 투자받은 자들의 일치된 공통된 의사에 따라 결정된 신용공여 투자 상대방은 오시리아 등 최종 실질 차주 투자대상이었으므로 이들만이 신용리스크의 발생주체로써 금리 등 투자조건도 이들의 신

용도만을 기반으로 결정되었음. 아무도 SPC 자체나 대주주에게 신용을 공여한다,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한 자는 없었음. 셋째 외관상 형식적으로는 SPC가 조치예정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소지가 있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과 관리, 운용권한은 오히려 조치예정자에게만 있었고 SPC의 실제 업무집행 권한도, 이를 위한 법인인감도 회계법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관리되어 대주주 등이 이에 개입하거나 자금을 전용할 여지도 없도록 절연하여 구조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치예정자가 신용공여를 한 대상은 명백히 오시리아 등 최종 실질 차주이지, 조치예정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아니라고 판단됨.

- ▶ (진술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음. 저희들이 금융감독원 검사 이후 약 2년 8개월 동안 동 건으로 인해서 지방의 작은 중소운용사로서는 영업력에 있어서 이미 많은 타격을 입었고 또 설립 취지와 다르게 미래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에 있어 이미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고 또 이 세월을 견뎌오고 있음. 부디 바라옵건데, 저희들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심의지원팀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더해서 금감원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최종 과징금 산정 상세내역을 보면 (3안)의 동기를, 부과율을 계산할 때 처음 안건에는 '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가능성에 대해 외부 자문을 구했고 이런 것을 고려

해서 '중'으로 만약 조정을 한다면 지금 심의지원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금액에서 또 다른 선택 버전(version)이 있는 것인지? 아까 말씀해 주신 (1안)일 경우에는 5억 1,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3안)의 위법동기를 만약 '중'으로 조정한다면 금감원 말씀에 의하면 3억 4,600만 원이 되는 것인지?

- (보고자) 부과비율이 75%에서 50%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부과액은 그만큼 감경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음.

○ (위원) 저는 이해했음.

- (보고자) 심의지원팀장이 설명한 것에 조금 더 부가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1안)이 아니라 큰 틀에서 (2안)으로 가자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대한 '그 밖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함.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서 신용공여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재산의 대여,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 신용위험을 수반한다.'고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그 밖에'라는 표현을 쓸 때 저희가 해석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포괄하는 특성을 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됨. 그렇다면 앞부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생각됨. 그러면 기존의 저희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와 일관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실질로 해석하고 자금 지원적 성격만 있는 것을 신용공여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 (2안)임. (2안)에서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의 특징적 차이는 결국 그 대출과 상환우선주(RCPS)가 서로 연

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질 것 같음. 그러니까 상환우선주(RCPS)를 받는 것이 대출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연결된 계약이라고 하면 1차 신용공여 역시도 자금 지원적 성격이 있는 것임. 그게 만약 아니라면 2차, 3차, 4차만 자금 지원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그래서 저희 자산운용과의 생각은 상환우선주(RCPS) 2차, 3차, 4차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나 저희는 자금 지원적 성격 있다는 것에 대해 보는 것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첫 번째에 대해서 상환우선주(RCPS)와 대출이 연계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심의하고 판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그런데 만약 (2안)을 선택하게 되면 본 건과 같이 주주 간 대출금, 출자비율 등을 조정해서 SPC가 특정인을 위한 이익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는 여전히 남지 않는지?
- (보고자) (2안)의 2-2번이 그렇게 비율을 조정해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줬을 때 원래의 공평한 비율이었을 때와 비교해서 특정인에게 이득을 준 비율을 차감하여 그 부분을 신용공여로 계산을 하는 방식임.
- (보고자)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음. 만약 (1안)에서 부과비율을 50%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최종 부과액은, 만약 30% 감면했을 때 5.89억 원은 변동이 없을 것 같음. 왜냐하면 저희가 자본총계의 10%까지로 해서 8억 2,400만 원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부과비율을 75%로 하든지 50%로 하든지 자본총계의 10%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75%나

50%나 최종 부과액은 동일하게 나올 것 같음.

○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1안)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1안)의 경우에는 부과비율을 조정해도 최종 부과액은 동일하게 나올 것 같음.

○ (위원장) (1안)의 (A안)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14시 38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 (위원장) 제36호 안건에 대해 수정의결하겠음. 동 건의 신용공여 위반 사안의 경우 법규에 대한 물리적 해석, 자금 지원적 성격, 투자자의 수익비용 분담비율의 차이 등을 감안시 동 건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으로 판단됨. 다만, 동 건의 경우 위법의 경미성, 부당이득의 경미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 대비 50% 감경한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7호 『로버스트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저희가 제출한 PT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관련된 제재 양정 조치예정내용들이 쭉 열거되어 있음. 귀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및 과징금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의할 경우 ■■■■ 개인에 대한 지적사항 2번(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과 회사에 대한 지적사항 3번(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6번(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7번(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이 검토대상임. 그중 지적사항 6번(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7번(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은 저희가 잘못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과드리겠음.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적사항은 2번(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3번(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두 가지임. 그중 지적사항 2번(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은 비록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직무정지 3월’의 중징계가 같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만일 이번에 귀 증선위에서 ■■■■의 잘못을 인정하시어 과태료를 부과하시면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월’ 중징계를 검토하실 때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임. 로버스트자산운용(주)은 임직원 26명이 근무하

는 소규모 자산운용사인데, 만일 대표이사이자 대표펀드 매니저인 ■■■■이 ‘직무정지 3월’의 중징계를 받으면 임원 연임 자격이 없게 되어서 사실상 회사 문을 닫아야 되고 임직원 26명은 일자리를 잃게 됨. 따라서 지적사항 2번(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이 비록 2,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건이지만 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해서 깊이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사항 2번(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은 ■■■■이 100% 출자한 법인인 (주)△△△△홀딩스 명의의 계좌로 수년 동안 옵션거래 하였다는 것으로 ■■■■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주)△△△△홀딩스 명의 계좌로 옵션거래 하고 그 거래명세도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임. 우선, 지적사항 2번(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주)△△△△홀딩스가 왜 설립되었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 2008년 (주)△△△△홀딩스를 설립하였음. 그런데 2010년 6월에 투자자문업 라이선스를 받으면서 (주)△△△△홀딩스의 명의를 로버스트투자자문으로 바꾸었고 2016년에는 사모전문운용사 라이선스를 받으면서 상호를 로버스트자산운용(주)으로 바꾸었음. 그러니까 ■■■■은 2010년 6월에 (주)△△△△홀딩스 상호를 로버스트투자자문으로 변경할 무렵 (주)△△△△홀딩스 상호를 유지하면서 향후 지주회사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별도로 다시 (주)△△△△홀딩스를 신설하였음. 따라서 (주)△△△△홀딩스는 별도 임직원을 두거나 독자적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유자산의 운용을 통한 금융수익만을 향유하는 명목상 회사로서 해외 헷지(hedge)펀드 운용사들이 흔히 이용하는 방식임.

금감원은 (주)△△△△홀딩스라는 법인명의의 계좌로 옵션 거래 하는 것을 ■■■■ 개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금감원은 그 근거로 ■■■■이 (주)△△△△홀딩스 100% 주주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대여한 거액의 대여금으로 (주)△△△△홀딩스 자산을 운용했다, 세 번째로 (주)△△△△홀딩스 이익이 나면 결국 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세 가지 점을 들고 있음. 그러나 ■■■■이 (주)△△△△홀딩스 100% 주주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법인의 계산이 아닌 주주의 계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그리고 ■■■■이 대여금 준 것도 비록 그 대여금으로 (주)△△△△홀딩스 자산을 운용했지만 그것은 대여금으로써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이율에 따라 ■■■■은 이자만 받았고, 실제 대여금으로 거액의 운용수익이 나더라도 그 운용수익은 법인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실제 그만큼 법인세를 냈음.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법인의 계산이 아닌 개인의 계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됨. 마지막으로 (주)△△△△홀딩스 이익을 배당 형태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법인의 자산운용 결과 이익이 나면 법인세 납부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 주주가 다시 배당소득세 납부하고 배당 받는 것을 가지고 법인의 계산이 아닌 주주의 계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금감원 말씀대로라면 수많은 1인 회사가 자금운용과 관련해서 법인 명의를 차용해서 금융실명법을 위반해서 거래하고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됨. 자본시장법상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업무상 얻은 정보를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 즉, 불공정거래행위나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

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본 건은 금감원도 인정하고 게시는 바처럼 ■■■■이 직접 옵션매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실제 (주)△△△△홀딩스가 ◆◆인베스트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인베스트는 주가지수 옵션거래를 위한 알고리즘 매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임. 그래서 실제 ◆◆인베스트 김성철 대표가 주문대리인으로서 실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동 알고리즘 옵션매매를 수행했음. 즉, ■■■■이 옵션매매에 관여해서 거래한 바가 전혀 없음.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나 이해상충 여지가 전혀 없음. 자본시장법이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통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또한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다고 봐서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무엇보다도 금융위원회가 2023년 1월18일 자기매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매매자금 출연 행위가 있었느냐, 저희는 당연히 있었음. 두 번째로 매매관여가 있었느냐를 보고 있는데 이 매매관여라는 것은 직접주문 또는 매매지시 협의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매매관여가 인정이 되고 매매관여가 없으면 자기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셨음. 본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이 주문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서 매매관여가 없었으므로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기매매에 해당하지 않음. 만일 (주)△△△△홀딩스 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의 계산으로 보고 ■■■■ 명의의 하나의 계좌로 거래하라고 한다면 결국 (주)△△△△홀딩스 명의의 자산을 ■■■■ 개인계좌로 옮겨서 ■■■■이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법원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이

나 배임에 1인 회사라도, 1인 주주와 회사는 별개이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하게 됨. 마지막으로 ■■■이 법인명의를 이용해서 이해상충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개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바가 없었다는 것은 명백함. 왜냐하면 ■■■이 자산운용사 운용보고,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또는 연별로 보고할 때마다 이 (주)△△△△홀딩스를 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공시했음. 이 자체가 이미 차명을 이용해서 본인의 거래를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명백함. 이러한 관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사항 3번(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임.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은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신용공여를 하면 안 됨. 그런데 로버스트자산운용(주)이라는 회사가 자기 회사 임원인 ▼▼▼에게 주택자금 2억 원을 대출해 줬다, 이것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금감원은 보고 있음. 동일한 규제가 상호저축은행법에도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상호저축은행 본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그러면 우리 회사도 로버스트자산운용(주) 본인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보면 로버스트자산운용(주)의 임원도 당연히 특수관계인이 아님. 이것은 대법원 판결은 아니고 하급심 판결이지만 이 사안은 자본시장법 사안임. 지배구조법 해석문제로 저희와 동일한 쟁점임. 이 쟁점은 뭐냐하면 금융기관이 100%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냐, 우리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냐가 쟁점

이었고 이 판결은 금융기관의 100% 자회사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이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당해 금융기관은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금융기관이 100%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아니다, 적어도 당해 회사가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이 판결임. 그렇기 때문에 은행법이나 보험업법을 보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와 별도로 당해 금융기관,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임원대출은 별도규제를 하고 있음.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만 하고 있지, 당해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게 대한 신용공여 규제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본 사안의 경우 당해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대출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마지막으로 신용공여 내용은 임직원 누구나 이용가능한 전세자금이나 주택 관련 대출임.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1억 원, 2억 원 대출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직원이 임원이 됐다고 2억 원 대출받은 것을 다시 징수해야 되는 것인지? 자기 직원에 대해서는 주택자금대출을 해 주는데 임원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음. 그리고 이 사안 자체도 일시적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40일 동안 주택자금을 대여해 준 사례(case)임. 이러한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음.

- (위원)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과 관련해서 직원 간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면 본 건 신용공여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지?

▶ (진술인) ■■■■ 대표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당시에 공시 업무나 이런 쪽을 잘 아는 여직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제기를 당시 경영관리팀장한테 했는데 경영관리팀장은 “우리 회사 직원한테 가능한데 임원한테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가볍게 생각하고 대출을 해 줬다고 함. 그리고 사실 ■■■■ 대표이사 본인은 그런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음.

○ (위원) 질문이 세 가지 있음.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여직원 분이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 “결산 때는 안 잡힐 테니까 일단 빼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음.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결산 때는 어차피 안 잡힐 테니까 9월에 대여를 하고 11월 중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니,”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음.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리려고 함. 하나는 ■■■■ 대표이사님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계좌가 있는지?

▶ (진술인) 제가 가진 자산은 모두 저희 회사에 맡겨서 운용하고 있고 제 이름으로 별도로 운용하는 계좌는 지금껏 없었음.

○ (위원) 그러면 개인 매매내역을 보고하신 적도 없으신지?

▶ (진술인) 없음.

-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은 금감원과의 문답서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원래 질문은 (주)△△△△홀딩스가 그동안 어떠한 영리활동을 해 왔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표님이 “로버스트자산운용(주)의 펀드에 넣었고, 두 번째는 해외주식이고, 세 번째는 지금 문제가 되는 ◆◆인베스트를 통한 옵션매매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펀드투자의 경우에는 개인으로 투자하면 금융종합과세가 되어서 세금이 커지니까 (주)△△△△홀딩스를 통해서 법인명의로 가입했다고 되어 있음. 그것을 읽으면 이것은 원래 개인으로서 투자를 하는 것이었는데 법인을 통해서 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했다고 읽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따로 거래하고 매매내역을 보고하는 계좌가 있는지를 여쭙봤더니 그런 것이 지금 없는 것인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으로는 전혀 운용하지 않는다고 들리는데 금감원에서 준 문답에 보면 실질적으로 (주)△△△△홀딩스가 개인투자의 수단(vehicle)으로 쓰인 것으로 읽힘.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 (진술인) 위원님, 한국의 세법이 해외선물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현실이고 저희 회사가 해외선물에 대한 이력(record)을 쌓아서 펀드를 키우기 위해서, 사실 제가 해외선물을 거래하려고 했으면 개인으로 일임으로 맡기면 될 터인데, 이것을 이력(record)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선물 펀드에 가입을 할 때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임. 그런데 사실은 법인세 25%와 배당세,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49.5%를 법인에서도 큰 차이 없이 부과됨. 그 부분은 저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것이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운용했다고 보시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임. 어차피 로버스트자산운용(주)도 제가 100% 출자하였고 (주)△△△△홀딩스도 100%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둘 간의 이해상충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음.

○ (위원장) 로버스트자산운용(주)이 금감원 검사를 최초로 받은 것인지?

▶ (진술인) 그전에 부문검사는 두 번 정도 받은 적이 있는데 종합검사는 이번에 처음 받았음.

○ (위원장) 저희들이 사모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제재안건 중에서도 종합백화점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 어쨌든 증선위 단계의 논의와 금융위 단계에서의 논의가 있겠습니까마는 설립 초기도 아니고 2008년부터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임. 그 부분은 대표님께서 앞으로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음.

▷ 진술인이 퇴장함.

- (보고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 대표가 일임했던 ◆◆인베스트는 등록되지 않은 투자일임업자임. 그렇기 때문에 본 건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로 검찰에 통보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 대표가 투자일임계약을 하기는 한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런데 그 투자일임계약을 통해서 매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건만 놓고 보면 꼭 업자하고만 해야 되는 것인지? 투자일임계약을 맺어서 매매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매매통지의무가 제외되는 것인데 그것이 꼭 업자하고만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베스트가 등록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차치하고, 그것만 본다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 (보고자) 등록된 일임업자에 대한 일임매매만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음.

○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그렇게 ‘업자하고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등록된 일임업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법령에 ‘투자일임계약’으로만 되어 있지 않은지? 그러면 업자하고만 해야 그것을 투자일임계약이라고 부르는 것 인지?

○ (위원) 개념 정의에 투자일임업자가 아예 등록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일임계약이라는 용어 자체도 아

마 등록된 업자를 전제로 한 용어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음.

- (위원장) ‘직무정지 3월’은 금융위 단계에서 별도 논의가 있
겠습니다마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관련하여
2억 원 대여해 준 것 때문에 과태료도 받고 대표이사에 대
해서 ‘직무정지 3월’이 들어가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38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멀티에셋자산운용의
합병 인가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39호 『(주)OO 등 67개사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제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해서 조사도 많이 받고 10개월 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했음.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선처 부탁드립니다.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이번 무상증자 사건 관련하여, 법규를 인지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음. 관련 법규를 제가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무상증자 관련 종목을 거래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약 3억원의 손실을 봤고, 개인채무만 현재 3억 원 정도 발생한 상황이고, 외 별이에 정년도 4년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무상증자 관련 종목을 거래할 당시 무상증자 정보의 출처를 알지 못하고 매매하였음. 저에게 정보를 전달해준 사람으로부터 그 정보를 지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이라고 하였음. 또한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한 것은 아니며 몇 번 성공하면서 ‘이것이 되는구나’하고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된 것이고, 무상증자 정보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된 것은 아님. 만약 무상증자 정보에 대한 확신으로 투자하였다면 저에게 정보를 알려 준 사람은 더 큰 돈을 투자했어야 했다고 생각함.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세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정보를 전달해준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한 번 사보라”고 해서 매수하였을 뿐 공시, 무상증자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름. 구체적으로 들은 정보가 없으니 선처를 바랍.

▷ 세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지인 분이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하여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모름.

▷ 마지막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2차 정보수령자부터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위반으로 의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고발한 1~3차 정보수령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장) 제39호 안건은 자조심 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음. 정보전달차수가 높아질수록 불법상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공개 내부정보라기 보다 사실상 시장정보에 가까워지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감경이 필요하고, 사망, 파산 등 과징금 부과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도 별도의 감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최초 유포자와 조사 불응자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대상자의 과징금을 일괄 50% 감경하고 사망자와 개인회생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각각 면제와 추가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40호 『OOOOOOOO(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OOOOOOOO(주) 대표이사 ◆◆◆임. 모범을 보여야 할 대표이사가 타인의 명의로 회사 주식을 거래한 점에 대해 매우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림. 제가 주식을 산다고 해도 회사 주가가 놓아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사면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회사 주식 500만 원을 처음으로 샀음. 매수금액이 얼마되지 않고 계좌개설이 번거롭게 느껴져서 제 지인의 명의로 계

속 거래한 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돌이키기 어려운 일이 되었음. 처음에는 회사 주가에 도움이 될까 해서 샀고 나중에는 제품경쟁력이 높아지고 실적도 좋아지니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가 좋아지니 주가도 오를 것이라는 것이 제가 회사 주식을 거래한 이유이고 동기임. 회사의 실적 정보를 미리 알고 이익을 얻고자 거래한 적은 한 번도 없음. 처음 회사 주식을 산 이후로 제가 회사 주식을 1년에 몇 차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습관적으로 이어져 지속하게 되었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타인 명의로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함. 그러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은 전혀 아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정황을 말씀드리겠음. 하나는 일반적인 회사의 사례와는 달리 당사 실적 공시는 주가 상승/하락에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임. 따라서 회사 실적 공시에 따라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당시 시장에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음. 회사가 좋아지니 주가도 오를 것이라는 것이 제가 회사 주식을 사는 이유였기 때문에 실적 정보를 이용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음. 두 번째로는 제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연결기준 잠정 영업실적 정보를 몰랐음. 먼저, 미공개를 이용한 거래가 아니었다는 정황을 말씀드리겠음. 실적을 공시하기 전에 제가 보유한 현금이 3.3억 원이 있었음에도 26일에 8,300만 원만 매수하였음. 만약 실적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3.3억 원 전액을 매수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음. 그리고 실적 공시한 이후에도 공시 전 주가 대비 16%나 더 높은 가격으로 두 번에 걸쳐

7,200만 원을 추가 매수하였음. 즉, 공시 전 매수금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을 공시한 후에 매수하였음. 공시 이후에도 높은 가격으로 이만큼 매수한 것은 평소 거래패턴처럼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증거임. 거래시간도 특별하지 않고 점심시간으로 평소 거래시간대와 다르지 않았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저희 회사가 일반적인 회사 사례와는 달리 실적 공시가 주가 상승/하락과 관계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당사는 거래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매출은 연초에는 적고 연말에는 크게 늘어나지만 다음 해 연초에 약간 감소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방식(pattern)이었음. 그래서 그랬는지 당사의 주가는 실적 공시에는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민감하지 않았음. 주가 상승은 동기를 알 수 없는 수급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특성은 시장에서도 그 당시 잘 알고 있었음. 아마도 당사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 로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였을 것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당사의 실적 공시 정보를 가지고 매수시점(timing)을 잡는 투자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의 사례만 보더라도 총 16번 공시를 했음. 그 16번 중에 본 건 외 1건을 제외한 14번은 주가변동이 미약하거나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진 경우도 있었음. 저는 단순히 제품경쟁력이 높아지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으니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주식거래를 했고 실적 정보를 이용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음. 잠정 실적 인지도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음. 회계실적 결산업무는

전적으로 CFO에게 위임하여 진행되었으며 회사 위임전결 규정에도 명문화되어 있기도 함. 따라서 결산 진행 과정에서 실적을 문의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음. 핵심논점인 연결기준 잠정실적은 회계실장이 잠정실적 자료를 IR팀에 넘긴 1월27일 12시59분 즈음에 확정되었고 그 이후 시간부터 대표이사에게 보고가 가능했음. 따라서 제가 주식을 거래한 시간은 1월26일 1시17분인데 대표이사에게 가장 빨리 보고 가능했던 시간보다 24시간이 더 빠름. 따라서 주식 매수 이전에는 실적정보를 인지할 수 없었음. 제가 비록 대표이사로서 소유주식 상황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우(愚)를 범했지만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드리는데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인지했거나 이용하지 않았음.

- ▶ (진술인) 이어서 변호인 의견 말씀드리겠음. 이 자리에서는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피조치자는 자조심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고발 의결되었음. 자조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을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실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라는 지위상 여러 경로로 실적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회사의 영업실적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면서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보고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으로 보여짐. 본 건을 심의하는 증선위원님들께서도 피조치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조심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피조치자가 그 당시에 맡았던 업무의 형태와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연결 잠정실적 등 각

중 실적을 보고받는 방식, 업무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거래를 할 당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다는, 고의 없이 한 행위라는 피조치자의 주장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됨. 본 건 회사에서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조직이 80개나 있음. 금감원에 제출한 대표이사의 일정표를 보더라도 출근하는 매일 각 조직별 월간업무보고를 대회의실에서 받는 방법으로 매우 바쁘게 업무를 하고 있고 근무시간 내내 거의 대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형태로 시간을 보냈고 점심시간 정도를 개인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 2020년 연결기준 잠정 실적에 대해서 아까 대표이사께서도 직접 얘기를 하셨지만 그 확정하는 시간까지 1~2일이 소요되고 확정된 직후에야 대표이사에게 보고가 이루어짐.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지 않음.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그 당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운 받은 PDF파일을 보면 1월27일 12시59분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직전에 확정되었고 그즈음에 대표이사가 보고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더 명확할 것이라고 보여짐. 그렇다면 피조치자가 1월26일 13시07분, 1월27일 11시34분에 주식거래를 했을 당시에는 잠정실적정보가 아직 생성되기 전이며, 그렇게 피조치자는 정보를 지득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매수를 한 것도 전혀 아니며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음. 물론 피조치자가 공시 전에 실적을 보고 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는 것은 아님. 다만, 흑자전환이라고 하는, 영업이익의 급증이라는 구체적인 보고를 받기 전에 평소와 같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하였고 공교롭게도 주식거래 종료 후에 잠정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음. 당시에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던 시기여서 잠정실적을 보고받으면서도 이 실적이 공시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못하였음. 아까 대표이사께서 3.3억 원이라는 보유자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일에 8,300만 원만 매수하였고 27일에는 1,000주만 매수한 점을 보더라도 이와 같이 엄청난 호재성 정보를 입수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여질 것임. 당시 코스닥시장은 2021년 1월22일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25일에는 18%까지 상승하고 평소 매매패턴대로 추적매수를 한 것임. 대표이사가 비록 소유주식 상황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 하지만 그 위반 관련해서는 26일에 1,440주를 매수하였는데 이는 총발행주식수의 0.01%정도 위반한 비율이고 27일 1,000주 매수는 0.007% 정도의 위반한 것으로써 위반비율이 1%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에서 비교적 경미한 위반인 점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람. 존경하는 위원님들, 금감원이 본 건에 대해 조치하고자 하는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피조치자는 바로 피의자신분이 되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됨. 이로 인하여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경영에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본 건 주식거래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수가 아니며 매수한 주식의 수도 크다고 할 수 없음.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비율도 비교적 작다고 할 수 있음. 부디, 이러한 점을 살피어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시어 조치원인사실에서 제외하

여 주시기를 바랍. 가사, 견해를 달리하신다면 고발로 인하여 피조치자가 처할 상황과 회사의 대외적 신용 등을 감안하시어 조치수준을 그보다 감경하여 주시기 바랍.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저는 원안에 이견 없음.
- (위원) 저도 원안에 동의함.
- (위원) 저도 의견 없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41호 『(주)오킨스전자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42호 『지오릿 에너지(주)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저는 다른 의견 없음.
- (위원) 의견 없음.

○ (위원장) 제41호, 제42호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16시 11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 의결안건 제43호 『○○○○○○○○○○○○○○(주) 등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주)과 책임운용력인 ◆◆◆
◆◆ 이사의 대리인 AAA 변호사임. ○○○○○○○○○○○○
○(주)과 ◆◆◆이사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견은 목차에 기재된 바와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
반에 대한 고의 여부, 과징금 액수의 적정성, 수사기관 통
보 조치의 적정성 순서로 핵심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사전통지의 내용은 금감원에서 既발표한 점
을 감안하여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이 가장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쟁점으로써
○○○○○○○○○○○○○○(주)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본 건 사
모펀드의 수익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 내지는 “사실상

동일한 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을 ○○○○○○○○○○○○
 (주)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과징금 부과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예정하고 있음. 최근 "같은 종류의 증권"과
 관련하여 법원은 동일한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미리 수회
 로 나누어 시리즈펀드 형태로 판매할 계획이 있었는지 여
 부, 그리고 개별펀드의 구성이 동일한지, 설정일과 상환일
 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법원의 판단기
 준에 의할 때 본 건 사모펀드의 수익증권은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
 ○○○○○○○○○(주)으로서 본 건 사모펀드의 수익증권
 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대상이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은 불가능하였음. 이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
 록 하겠음. 발표자료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본 건 사모펀
 드는 CCCCCCCC CCCCCCCC CCCCCCCC CCCCCCCC(이
 하 CC)가 설립하여 운용하는 BBBB펀드에 투자하는 재간
 접 펀드임. 구체적으로 BBBB가 PPM(Private Placing
 Memorandum, 이하 PPM)에 기하여 시리즈별로 발행하는
 대출참여형 선순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임. 그런데 BBBB펀드가 발행하는 시리즈별 집합투자증권
 은 비록 형식상 명칭은 BBBB펀드로 동일하지만 실질은
 시리즈별로 상이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설정되고 그 구
 성도 모두 달라 각각 다른 증권이었음. 즉, 기초자산의 경
 우 시리즈별로 각각 다른 대출계약에 참여하는 등 기초자
 산이 상이하였으며 그 결과 각 시리즈별로 대출금액, 이
 자율, NAV, 차주, 만기, 채권등급 등이 모두 달랐음.
 BBBB가 ○○○○○○○○○○○(주)에게 송부한 PPM에서

도 각 시리즈는 서로 다른 기초자산군에 투자될 예정이라
 거나 서로 다른 NAV를 가질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음.
 또한, 운용계좌 역시 BBBB펀드는 각 시리즈별로 별도의
 계좌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었으며 투자금이 서로 혼용되
 어 운용되지도 않았음. ○○○○○○○○○○○○○(주) 역시
 BBBB 펀드의 주거래은행인 의 일일계정명세서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기도 하였음. 이와 같은 ○○○○○○○○○○○
 ○○○(주)으로서의 동 건 사모펀드의 수익증권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의 대상이라고 인식할 수는 없었음. 나아가 본
 건 사모펀드 설정 당시 시행되던 舊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상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사
 실상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
 적인 요건은 동일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증권발행일 것
 이라고 할 것임.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BBB
 펀드는 시리즈별로 각각 다른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
 개로 관리운용되고 있는 특성이 있어 본 건 사모펀드가
 동일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증권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이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본 건 사모
 펀드의 수익증권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사실상 동
 일한 증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함. 부디,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최대한 선처해 주실 것을 부
 탁드립니다. 과징금 액수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인 자본시장조사업
 무 규정은 2021년 5월12일 개정을 통해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비율을 신설하였음. 본 건 사모펀드
 의 수익증권은 비록 모두 해당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발
 행되었으나 조사업무 규정 부칙 제2조 등에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더 가벼운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본 건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신설된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법령의 문헌상 비교적 명확함.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하여 신설된 부과기준에 따르면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과징금 부과비율은 최저 100분의 0.1 내지 최고 100분의 0.5에 이르고 있음. 위 기준에 따라서 본 건 사모펀드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본 건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최저 1억 9,000만 원에서 최대 9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준에서 과징금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에 대해서는 약 20억 원의 과징금부과 예정이라고 조치예정통보가 되었음. 아마도 조사업무규정 [별표2] 제4호가목8호 각주에 따라서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운용기간을 부과비율에 곱하여 적용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임. 하지만 위와 같이 동 규정에서 펀드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부과비율을 가중하도록 한 것은 최초에 설정된 운용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위법성 내지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는 최초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당시에 확정된 운용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비율을 가중하는 것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부과비율을 별도로 마련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임. 또한, 금융위원회 2021년 5월12일자 보도자료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발행인이 취득한 보수보다 과징금이 더 커지는 등 부과액이 과도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시의무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이 개선된 점

을 보더라도 ○○○○○○○○○○○(주)이 수취한 보수금 4억 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운용기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부과기준 개선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환매가 연기된 기간까지 펀드운용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게 된다면 수범자의 귀책과는 무관하게 과징금의 규모가 무한히 확대되고 과징금의 부과기준 개선 취지와 달리 발행인인 운용사가 수취한 보수보다 과징금이 현저히 커지는 등 책임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임. 부디, 본 건 사모펀드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운용기간을 과도하게 산정한 오류가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음. 또한, 본 건 펀드의 운용기간을 환매연기 이후의 기간까지로 보는 것은 투자자보호나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주의의 무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음. 즉, ○○○○○○○○○○○(주)이 본 건 사모펀드의 만기를 연장한 것은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주의의무에 따라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음. 실제 만기연장 이후에도 ○○○○○○○○○○○(주)는 별도의 운용보수를 수취하지 않으면서 자금회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 투자자 이익을 위한 노력이 과징금 추가산정의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울한 결과라고 생각함. 만약 환매연기 이후의 기간이 과징금 추가산정으로 귀결된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다수의 운용사들이 환매연기와 청산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즉시 청산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자본시장법상 선관주의의무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궁극으로 투자자의 이익에도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 부디, 이러한 사정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만기 이후 ○○○○○○○○○(주)은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펀드만기를 연장하였음. 그리고 투자이익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3년 1월 기준 약 23%의 투자금을 회수하였으며 투자자들에게 분배하였음. 또한, 2024년 4월 중에 60억 원 가량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CC로부터 연락받았음. 향후에도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투자원금의 대부분이 회수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인바 부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최대한 선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편 ○○○○○○○○○(주)이 본 건 사모펀드 발행을 통해 수취한 수수료. 즉, 이익은 약 4억 원임. ○○○○○○○○○○○○○○○○○(주)이 취득한 이익을 고려할 때 사전통지된 과징금 약 20억 원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최근 2023년 1월18일자 금융위 보도자료와 앞서 말씀드린 2021년 5월12일자 보도자료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듯이 발행인이 취득한 이익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온 점을 고려하셔서 본 건 사모펀드와 관련된 과징금 역시 발행인인 ○○○○○○○○○○○○○○○○○(주)이 취득한 이익인 4억 원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최대한 감경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 환매 연기가 된 이유와 아까 2023년 4월까지 20% 정

도의 투자금이 회수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추가적으로 회수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궁금함.

- ▶ (진술인) CC가 받는 돈이 약 100억 원이고, 저희가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60억 원 정도의 자금 회수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음. 인도네시아 탄광이 이것에 대한 가장 큰 담보가치를 가지고 있음. CC가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탄광이 중국 업체를 통해서 올해 안에 매각이 이루어진다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 진행된다면 사실은 올해 안에 60~70% 가까이 회수될 예정이고 회계법인을 통해서 이 담보가치를 종합평가했을 때는 회수가능성이 126%까지 이른다는 보고서도 있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법률대리인 GGG 변호사임. 지적사항 및 진술요지 설명 드리겠음. 금감원은 조치예정자가 판매한 5개 펀드의 수익증권이 사실상 동일증권에 해당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공모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본 건 펀드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주선인 책임을 물어 7억 9,8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예고하였음. 하지만 위 5개 펀드의 수익증권들은 동일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고 조치예정자와 같이 펀드설정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판매사까지 주선인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양정이나 제척기간 도과 가능성 등에 있어서 본 건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본 건 처분을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 이하에서는 자조심에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조치예정자의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음. 자본시장법은 동일증권 간 주 규정 도입 시에 미국 SEC의 거래통합기준을 참고하였는데, 동 기준은 여러 요소 중에 단일한 자금조달계획 여부. 즉, 개별증권의 발행이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동일증권 판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고 있음. 본 건 펀드들은 EEEEE와 TRS계약을 체결하고 EEEEE는 BBBB펀드에 투자하며 BBBB펀드는 또 다른 역외펀드인 DDDD펀드와 대출참여계약을 체결한 후에 최종적으로 DDDD펀드가 소싱한 무역금융대출 채권들을 기초자산으로 편입하는 구조로 전체 투자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그런데 본 건 5개 펀드들은 최종투자처인 DDDD의 자금수요에 따른 투자요청에 맞추어 그때그때 설정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애초에 동일한 자금조달계획이 존재하지 않음. 즉, 본 건 펀드들은 각 펀드의 설정시점에 후속 투자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 자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는 구조이고 선행펀드 설정과 후행펀드 설정 사이에 아무런 의존관계가 없음. 본 건 펀드의 투자대상인 BBBB펀드의 발행주식은 운용사가 자신의 대출수요를 고려하여 전적인 재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행 여부를 결정한 후에 외부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 의사를 문의하여 이를 수락한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를 그때그때 받는 구조임. 그렇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는 ○○○펀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외에 타 기관투자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구조임. 그리고 설령 후행 자금조달에 실패하였다고 하여 선행펀드의 운용에 아무런 영향이 발생되지 않음. 따라서 외부 투자자인 본 건 펀드의 입장에서는 DDDD펀드가 향후 어느 정도의 대출거래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대출투자 기회가 투자자 중 하나인 BBBB펀드에게 얼마만큼 배정될 것인지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그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함. 나아가, 본 건 펀드가 투자한 BBBB펀드 주식은 그 발행 회차별로 구분되고 각 회차별 모집금액은 BBBB펀드와 DDDD펀드간 체결된 대출참여계약에 의거하여 차주, 대출참여 금액, 신용등급, 신용보강 보험사 등을 모두 달리하는 별도의 대출채권에 투자되었음. 미국이나 케이만 등 외국법체의 경우에는 동일법인 내부에 특정사업 부문이나 특정 자산의 가치만을 표창하는 소위 트래킹주식(Tracking stock) 형태의 주식발행이 허용되고 있음. BBBB펀드 역시 이러한 트래킹주식(Tracking stock) 형태의 주식을 발행하면서 이를 시리즈 주식으로 명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BBBB펀드는 각 시리즈 주식별로 편입자산 내역을 구분 관리하고 있고, 각 시리즈 주식의 기준가 역시 별도로 산정되고 있음. 즉, 각 시리즈별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들은 펀드별로 그 수익과 위험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투자대상자산이 구별되고 이에 따라 각 펀드에 내제된 실질적 투자위험 역시 상이한 구조임. 만약 본 건처럼 선·후의 증권발행이 하나의 자금조달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상호 의존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자금수요자가 일정한 형태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선·후 증권발행을 동

일증권으로 보게 된다면 일정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나 ○○○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발행한 경우 이는 모두 동일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형사벌의 근거가 되는 증권신고서 미제출의무의 범위를 너무나도 부당하게 확대해석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귀 위원회는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대상 펀드판매사는 펀드 발행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본 건의 경우 본 건 펀드나 그 기초자산 역외펀드는 조치예정자 이외에도 펀드, DLS, 신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조치예정자가 본 건 펀드의 발행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본 건 펀드 설정 전 사전 수요예측조사를 토대로 운용사와의 협의를 통해 판매규모를 미리 결정하고 판매한 것도 아니었음. 따라서 조치예정자는 펀드의 발행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마지막으로 과징금 부과양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징금은 부과대상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치예정자는 본 건 펀드 설정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 본건 펀드들이 공모규제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음. 무엇보다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추가로 확대한 관련 규정은 본 건 펀드 설정 이후에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판매사인 조치예정자에게 본 건에 대한 중과실이 있었다

고 보기도 어려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상 피해배상시 배상액 범위에서 기본과징금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혹시라도 본 건 과징금 산정시 해당 요소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를 반영하여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라면, 여기에서 피해 배상한 것은 판매사가 불완전판매 피해 배상한 것인데, 저희가 반드시 감경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만약 감경을 논의한다면 작량감경의 영역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음. 왜냐하면 판매사들이 이것에 대한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신지?
- (보고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 투자자 피해배상을 위반행위로 인한 배상 규정에 따라서 감경을 하게 된다면 일정 비율 감경으로 작량감경 규정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음.

(17시 32분 정회)

(17시 47분 속개)

- (위원장) 제43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우선, 발행인인 ○○○○○○○○○○○(주)에 대하여는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

다는 측면에서 조치선례를 존중하되, 환매중단 이후부터 조사착수까지 기간 전부를 운용기간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등의 목적 하에 펀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조치대상자가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오히려 과징금이 과다해지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발행금액, 발행인이 취한 이득, 투자자 피해 규모 측면에서 투자대상 기초자산이 동일한 유사조치 선례와의 조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비 과징금을 50% 감경하여 과징금을 10억 원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음. 아울러 금감원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과징금 부과기준에 운용기간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운용기간을 펀드설정일부터 펀드만기일까지로 하되, 환매중단된 이후 운용보수가 수취되는 기간은 운용기간에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람. 다음으로 주선인에 대하여는 환매중단 이후 사적화해 방식으로 배상하는 등 투자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고, 환매중단 이후에 운용기간을 감안하여 과도하게 과징금이 산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 대비 과징금을 30% 감경하여 □□□□은 과징금 5억 5,920만 원, ★★★★★★(주)은 과징금은 4억 3,510만 원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 의결안건 제44호 『(주)신한은행 등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저는 자조심 심의결과와 같은 의견임.
- (위원) 저도 수정심의안에 동의함.
- (위원) 저도 수정심의안 동의함.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32호 『(주)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장) 위원님들 검찰고발이나 통보 여부 및 감사인 조치에 대한 추가 감경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 (참여자) 회사 구조 등 고려하여, '통보'가 적절하다고 생각함.

- (위원) 저는 다른 의견 없음. 그리고 감사인에 대해서도 2단계 감경이 적절한 것 같음.
- (위원) 저도 검찰통보에 동의하고, 감사인에 대해서 2단계 감경에 동의함.

○ (위원) 저도 동의함.

○ (위원장) 제32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회사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된 점을 존중하여 '고의 II단계'를 '고의 III단계'로 적용하여 과징금은 50% 감액하고, 감사인지정 2년, 前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검찰 통보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음. 그리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조치 중요도를 각각 2단계씩 감경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45호 『(주)0000000000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첫 번째로 종속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 종속회사와 지배회사의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임원이 겸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배회사는 양형조치 중 '고의'를 받았음.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외부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적정한 감사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 두 번째, 지배회사의 주주는 종속회사의 잘못으로 주권매매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또한, 종속회사의 양형조치로 대표이사, 재무담당임원은 과징금,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처벌을 이미 받은 바 있기에 중첩되는 처벌이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감리진행과정에서 재무제표의 오류에 대한 부분을 인식함과 동시에 관련 연결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하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를 즉시 수행하여 관련 사업보고서를 수정공시하였음.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 (위원) 저희가 종속회사를 제재했고, 그 당시 당사자인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이 모회사의 대표이사면서 재무담당임원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이 건은 연결재무제표 위반이고 종속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 위반이기도 하지만 위반행위의 본질은 사실 동일한데, 그런 측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궁금함.

- (보고자) 과거의 조치사례에 따라서 조치를 내리는 사안이고 과거 사례에서는 각각 부과한 것으로 봤음.

- (위원) 결국은 하나의 경제 실체인데, 지난번에 과징금이 종속회사에 부과가 됐음. 저는 감경을 할 수 있으면 감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위반행위의 본질은 사실 동일한데, 이것을 가지고 자회사에게 과징금 부과하고 또 연결재무제표 잘못 작성했다고 해서 모회사에게 과징금을 또 부과하는 것은 이중조치의 측면이 있어 보임.

(18시 32분 정회)

(18시 35분 속개)

- (위원장) 제45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겠음. 상장회사인 지배·종속회사 간에 동일한 행위로 인한 회계위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배회사인 본 회사의 과징금을 30%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18시 36분 정회)

(18시 56분 속개)

- ☐ 의결안건 제46호 『OOOOOOOOOOO(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부분에 대해서 위반동기를 ‘고의’로 판단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임. 회사는 회계기준에 따라 자회사가 아닌 현금창출단위(CGU)별로 손상검토를 했으며,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음. 천진법인의 경우에는 2018년말에 영업이익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명확히 손상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실제 당사는 2018년에 제반사항을 반영해서 손상검토를 한 바도 있음. 다만, 2019년도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금감원 지적보다 한 해 늦게 손상처리한 것인데 시기나 범위가 명확하지도 않은 해외 법인 일부 시설 이전계획만을 주요로 동기판단을 보는 것은 과도했다고 보임. 또한 금감원의 주된 동기판단 이유는 출자금으로 매출채권 변제를 하는 일종의 자금순환거래를 당초부터 의도했고 그래서 영업이익개선을 의도했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출자주식 손상과 매출채권 손상 환입은 판단기준이 다름. 그러니까 출자주식 손상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매출채권 대손 환입은 가능하기 때문에 ‘고의’ 판단의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생각됨. 이와 같은 부분을 조치에 충분히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음.

○ (위원) 자금거래가 없었으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은 맞는지?

▶ (진술인)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다른 신규사업으

로 충분히 보완(cover)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음.

- (위원) 지금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상황이었는데 2018년에도 영업손실이 발생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 맞는 것이지?

▶ (진술인) 맞음. 그것은 사실임.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필리핀이나 천진법인은 독립적으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는 해외 생산공장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으로 추정하는 평가보고서를 저희에게 제출했음.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서 저희는 하나의 통합으로 추정하는 평가보고서가 이 회사에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였음.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해외 생산공장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는 오히려 종속기업의 가치를 왜곡시킨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평가액이 해외법인 투자주식 및 본사의 영업자산 합계액을 상당히 크게 상회하였기 때문에 손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음. 더불어 2018년 당시에 필리핀과 천진법인 설비를 베트남 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한 투자신고서가 작성된 상태인데 이것은 기존 영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계획이었음. 저희가 판단하기에 단순한 생산기지 이전은 기업 전체의 가

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래서 저희는 필리핀법인 및 천진법인 손상 시기는 이전 계획이 수립된 2018년이 아니고 실제 생산 설비가 베트남으로 이전된 2019년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결론적으로 이것은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베트남에서 그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므로 실제 2019년에 베트남법인의 가치가 그만큼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음. 그래서 이전될 자산이 2018년 현재에는 필리핀법인이나 천진법인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2018년에는 손상이 없는 것이 맞음.

▷ 마지막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18년 당시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다음에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예전에는 반영했던 것을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합의서 체결과 관련된 사용인감 날인 실적을 사용 대장에서 누락했다,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내용에도 계약체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중과실’이 되죠? ‘고의’ 아닌가요? ‘중과실’로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 (보고자) 별도재무제표상으로는 이면계약 체결 사실이 회계 처리가 안 되었는데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면계약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었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중과실’로 판단할 때 고려했음. 과거 2015년에는 회사가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회사를 매각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는 부채를 적게 보이고 싶어 하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고의’로 판단했는데 2018년 시점에는 회사가 새

주인에게 넘어가고 그런 목적성이 안 보였던 그런 두 가지를 고려했음.

- (위원) 투자주식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업외 비용이니까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지?

- (보고자)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부분 전체적으로 이런 거래가 없었다면 영업이익을 이렇게 계상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음. 그런데 그 회계처리만을 따졌을 때 영업이익에 영향이 없는 것은 맞음. 그렇지만 영업외 수익이지만 적자폭 자체가 전년도 대비 한 70% 정도 감소되었다는 것은 회사 공시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 있었던 것 같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47호 『OOOOOO(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본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지배구조가 변경되어 새로운 경영진이 과거 재무제표 오류를 발견한 후 외

감법 제22조에 따른 포렌식을 통해 스스로 과거 재무제표를 정정한 新외감법의 모범적인 사례임. 회사는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 바 있음. 다수의 투자자를 위한 경영진의 자정노력의 결과가 막대한 과징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일만은 없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인지정과 관련하여 이미 회사는 2021년에 ☆☆☆ 前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면서 감사인 지정을 받아 지금까지 지정감사를 받고 있음. 완전히 동일한 건은 아니지만 재무제표 재작성의 단초가 된 ☆☆☆ 前대표이사의 횡령·배임 건으로 인해 이미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다시 감사인지정 조치를 부과받으면 이는 중복조치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기본적으로 ◇◇◇ 前대표이사는 ☆☆☆와 지시·공모 관계에 있지 않음. 이 건은 동서인 ☆☆☆에게 회사의 전권을 위임하고 ☆☆☆의 주도 하에 본 건 회계분식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는 회계분식과 관련한 여러 혐의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없음. ◇◇◇ 前대표이사가 2019년 9월에 복귀한 이후에 형사고소를 함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였고 회계분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공시한 점도 참작해 주시기 바람. 또한 2013년, 2014년 외부감사법 위반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어서 검

참고발의 실익이 없는 점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대심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위원님들, 진술인 또는 금감원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2021년도 사업보고서는 ◇◇◇씨가 서명하지 않았는데 왜 책임을 묻는가, 그리고 왜 회사 측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보고자) ◇◇◇씨의 경우 2020년말, 그리고 직전 2021년 6월말 당기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보장하고 본인 보유주식을 매도해서 現경영진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 책임이 있음. 現 경영진은 회사에 대한 주식 매입 시점인 2022년 1월 동 직위에 취임한 직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前경영진의 불법행위에 기이한 회사의 회계처리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외부전문가 조사, 2022년 2월부터 4월 기간 중 조사를 실시하고 재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 모두 반영하여 2021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고 이후에 발견되지 못한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로 외부전문가 조사 및 재무감사를 다시 실시하여 과거 재무제표까지 모두 자진정정한 점을 감안해서 조치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 (진술인) 이 건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동서한테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서를 형사고소까지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두 사람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시설·기계장치 허위계상 지적사항 경우 ☆☆☆, □□의 공모로 이렇게 했는데 ◇◇◇씨가 직접 지시한 정황이나 증거 같은 것이 있는지?
- (보고자) 2007년도에 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씨가 이것을 해결하라고 했고, 그때 ☆☆☆씨가 유형자산으로 가야 될 부분이 비용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형자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그것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관행적으로 굳어졌음. 그리고 ◇◇◇씨가 대표이사로서 다시 취임한 이후에 □□씨 등에 의해서 분식회계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분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서 이를 개선하고 회계처리를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했던 행위들을 하지 않았음.
- (위원) 매각 협상 당시에 재무실사는 했는데 유형자산실사는 ◇◇◇ 대표가 막았다, 만류했다, 하지 않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 ▶ (진술인) 그 당시에 모든 자료나 직원들 인터뷰가 다 진행되었고 단지 실사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다 정상인줄 알고 자료는 다 드렸으니 나중에 확인해도 되지 않겠느냐 협조를 요청한 것이지, 막거나 그러지는 않았음.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세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회계분식이 있었던 상태였고 이렇게 중하게 조치를 받는 일인 줄 알았다면 저는 그 당시에 재무책임자가 공석이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재무책임자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임. 그런데 저는 위법사항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M&A 업무와 포렌식 조사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했음.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정상적인 급여 외에는 어떠한 혜택은 전혀 없었음. 또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의 지시를 받아 업무수행을 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지만 저에게 형사상의 문제로 이어진다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퇴사를 해야 되고 이는 단순히 과징금 문제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간곡히 선처를 요청드리는 사항임.

○ (위원) □□의 지시에 따라서 유형자산 전표를 수정하는 업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수정하신 것인지?

▶ (진술인) 최초에는 단순히 외주가공비인데 유형자산이었나 하고 생각을 했고 관련된 품의서도 같이 주니까 사실 그것을 명확하게 인지는 못했음.

▷ 세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부정위험 평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과 관련하여 회사는 수주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해서 안성에 본사를 신축 이전하였으며 장비조립 임가공 시설 설치 등 대규모 투자를 이행하였음. 이러한 대규모 시설 투자가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추세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유형자산 증가 추세는 비정상적으로 의심되는 거래라고 판단하지 않았음. 경영진의 부정이 개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회계원장 테스트, 회계추정치 검토, 비정상적 거래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수행한 결과 부정을 의심할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 또한 저희는 유형자산 취득 관련하여 외부증빙이라고 할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영수증을 확인하여 거래의 실재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였고, 회계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기안서 등 실무부서인 시설팀부터 재무팀장, CFO, 최고경영진까지 결재가 이루어진 투자의사 결정과 관련한 서류를 확인하였음. 또한, 금액적으로 유의한 거래에 대하여는 대체적 절차로 신규 사업보고서와 개발 보고서를 추가 징구하였고 일부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실물검사를 수행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었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포렌식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경영진 및 여러 임직원의 공모가 수반된 조직적이고도 고의적인 감사방해행위로 인해 의도적으로 위조하여 제출한 허위 기안문, 신규 사업보고서, 개발보고서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 진술인이 퇴장함.

(20시 41분 정회)

(20시 53분 속개)

- (위원장) 제47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겠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었고 재무제표도 정정되었으므로 前경영진 고발은 유지하되 회사에 대한 고발은 ‘검찰통보’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現최대주주 및 경영진은 이번 위반 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과징금이 과도한 점과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자진정정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20% 감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지정과 관련하여 금번 회계위반 관련 감사인 지정 조치 시 前대표이사 횡령·배임 피소로 이미 지정조치를 받았으므로 중복조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사인 지정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인 관련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위 의견대로 ‘13년 ~ ‘18년 감사인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안서 위조 등 외부감사방해가 있었고 외부증빙을 징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대체적 절차를 수행한 점을 감안하여 ‘과실 III단계’로 하여 ‘경고’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년 ~ ‘21년 감사인에 대해서는 전기조서 검토 등 주요 초도감사 절차는 입증감사가 아님에 따라 기초잔액 왜곡표시 발견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1단계 감경하여 ‘과실 IV단계’로 ‘주의’ 조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 보고안건 제5호 『000 00 0 0000 000 0000 0000 0000 00』를 상정하고 서면보고 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 의결안건 제48호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을 상정하고 서면보고 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49호 『(주)세일기계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을 상정하고 서면보고 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50호 『증권선물위원회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을 상정하고 서면보고 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4년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